

##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

2016. 11.

금융위원회  
금융감독원



### 목 차



I. 검토 배경 .....	1
II. P2P 대출시장 현황 .....	2
III.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.....	5
1.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.....	6
2.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방안 .....	9
IV. 향후 계획 .....	11

## I. 검토 배경

-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\*를 보임에 따라,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

\* 대출잔액(억원) : ('15.12) 235 → ('16.3) 724 → ('16.6) 1,129 → ('16.9) 2,087

- 해외 P2P 대출시장의 경우,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부정대출 및 업체의 횡령 등 금융사고\*가 발생(미국, 중국)

\* (美) 'Lending Club'은 '16.5월 2,200만 달러 규모의 부정대출을 중개  
(中) 'e썬바오'는 '15.12월 허위정보로 500억 위안의 자금을 모집하여 유용

- ➔ '5차 금융개혁위원회'(7.1일)에서 P2P 대출 규율방안\*에 대해 논의하고, 'P2P 대출 가이드라인' 제정 결정(금융위·금감원 마련)

\* ① 현행 유지 ② 크라우드펀딩에 포섭, ③ 별도 법률제정, ④ 가이드라인 제정

- 現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으로 '투자자 보호'와 '핀테크의 성장'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

- 최근 머니옥션 사례\* 등으로 인해 국회·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(개인)투자자 보호 강화 요구를 반영

\*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 지연

- '투자한도 설정', '고객 투자금의 분리관리'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, 기타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

- 아울러,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, 금감원의 검사·감독 등을 통한 이행력 확보방안 마련도 필요

\* 대부분의 P2P업체(플랫폼)은 현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'통신판매업'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 → 금감원의 검사·감독 대상이 아님

- 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TF를 구성 (TF팀장: 금융위 사무처장)하고 다각적인 논의 진행(7.22~10.27일)

## II. P2P 대출시장 현황

※ '한국P2P금융협회'에 가입한 29개사 중 자료를 제출한 27개사 기준

- (대출잔액) '16.9월말 기준으로 대출잔액은 2,087억원이며, '16.6월말(1,129억원) 대비 84.9% 증가

- 대출유형별로는 법인·사업자 담보대출이 940억원으로, 대출 잔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(45%)을 차지

\* 개인신용대출 375억원, 개인담보대출 499억원, 법인·사업자신용대출 273억원

- 최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(소규모 주택건설 자금 등) 증가 때문으로 보이며, 한편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감소\*

\* 개인신용대출 비중: ('15년말) 48.8% → ('16.6월) 27.8% → ('16.9월) 17.9%  
법인담보대출 비중: ('15년말) 10.4% → ('16.6월) 41.7% → ('16.9월) 45.1%

- (투자 측면) '16.9월말 기준으로 투자자 수는 135,747명이며, '16.6월말(37,490명) 대비 262% 증가

- 건당 투자액은 1.5백만원으로, '16.6월(3백만원) 대비 50% 감소

- 급격한 투자자 증가 및 건당 투자액 감소는 '16.8월 협회에 신규가입한 '팝펀딩'(투자자: 66,488명, 건당 투자액: 0.2백만원)에 기인

\* 팝펀딩 제외시 투자자수는 69,259명('16.6월말 대비 84.7% 증가)이며, 건당 투자액은 2.9백만원 수준('16년 6월말과 유사)

- (차입 측면) '16.9월말 기준으로 차입자 수는 4,891명이며, '16.6월말(3,270명) 대비 49.6% 증가

- 건당 대출금액은 42.7백만원으로, 법인·사업자 담보대출비중이 높아지면서 '16.6월말(34.5백만원) 대비 23.8% 증가

□ (연체율) 1.3%(27.6억원)로 '16.6월말(0.5%)과 비교시 증가 추세

- 대출채권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였으며, 특정 업체의 매출담보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한 것이 주된 이유

\* 특정 P2P업체의 매출담보대출에서 8.7억원의 연체(1개 업체) 발생

□ (평균 차입금리)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, 일반적으로 11~15% 수준으로 차입금리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

\* 대출유형(개인vs.법인, 신용vs.담보 등)에 따라 차입금리 차이 발생

- 대출기간은 대략 1년(12개월)이며, 6개월~36개월 사이에 분포

□ (평균 수익률)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, 차입금리(대출이자율)와 유사한 10~13% 수준에서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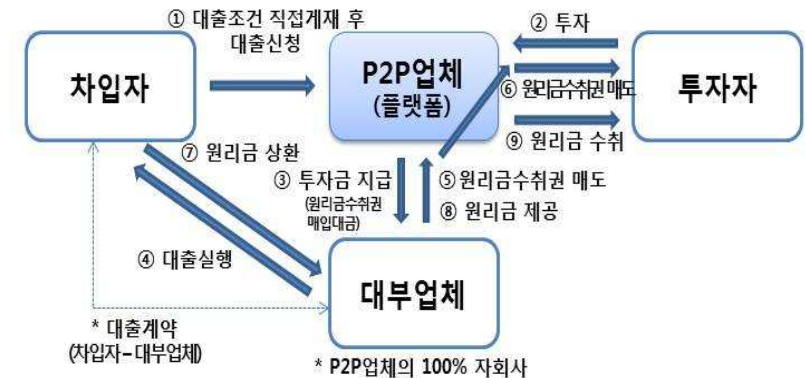
#### < P2P 대출시장 현황 >

(단위 : 억원,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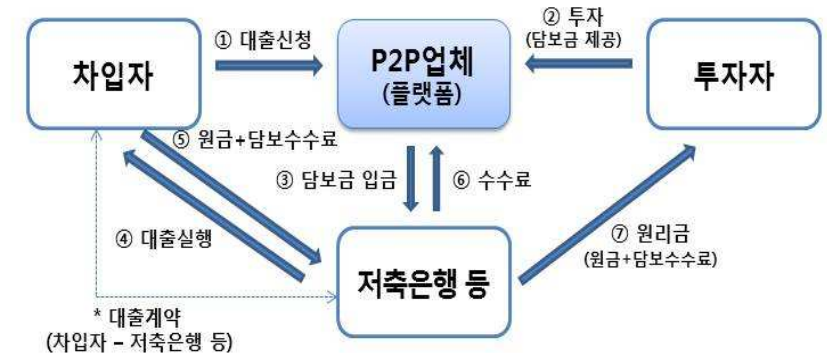
구 분		'15년 말	'16.6월	'16.9월	'16.6월 말 대비	
					증감	증감률
대출잔액	개인신용대출	115	314	375	62	19.4
	개인담보대출	47	188	499	311	165.4
	법인·사업자 신용대출	49	157	273	166	73.9
	법인·사업자 담보대출	25	471	940	469	99.6
	합 계	235	1,129	2,087	958	84.9
누적 대출액		335	1,645	2,940	1,295	78.7
투자자 수		8,334	37,490	135,747	98,257	262.1
	건당 투자액(백만원)	2.8	3.0	1.5	(1.5)	(50.0)
차입자 수		1,031	3,270	4,891	1,621	49.6
	건당 대출액(백만원)	22.9	34.5	42.7	8.2	23.8
연체율		0.1%	0.5%	1.3%	-	-

## 참 고 P2P 대출 구조

### 가. 원리금수취권매입형 (대부업체 연계)



### 나. 현금담보제공형 (은행·저축은행 연계)



### Ⅲ.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

#### 【기본방향】

①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·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마련

① 투자 한도 설정, 고객자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, P2P 업체(플랫폼)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

② 투자자의 경우,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 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체계를 마련

\* 투자한도 금액 설정시, ① 일반 개인, ② 일정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, ③ 전문투자자(개인)·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

③ P2P 업체(플랫폼)는 투자자와 차입자의 투자·차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은 플랫폼에 공시

④ 그 밖에 영업 또는 광고시 중립적 중개업체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

② P2P 업체(플랫폼)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, 연계 금융회사(대부업체, 은행 등)를 통해 준수를 유도

① 감독당국은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시 연계 금융회사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

②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·감독을 위해 관계 법령(대부업법 시행령 등) 개정 등을 추진

### 1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#### 1) 투자한도

□ (현황) P2P 업체 중 투자한도를 설정\*한 업체도 있지만, 다수의 업체는 별도 투자한도가 없는 상황(한국 P2P금융협회 가입업체 기준)

\* 업체별 차이가 있으나 대략 5~50%까지 1인 투자한도를 설정·운영

□ (규율방안)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간 1개 P2P 업체를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 및 총 누적금액 한도를 설정

\* P2P 대출은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별도의 중앙기록관리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이 없으므로 업체별 관리로 한정

➔ 투자한도는 크라우드펀딩 체계를 따르되, 스타트업 주식투자과 대출의 리스크 차이, 현행 투자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

① 개인투자자 :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5백만원, 총 누적금액 1천만원으로 제한

② 소득요건\*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: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2천만원,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설정

\* i) 이자·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ii) 사업·근로소득 1억원 초과

③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\*(개인) :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

\* i)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, ii)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으로, iii)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

## 2) 투자금의 분리 관리

- (현행) 대다수의 P2P 업체는 거래은행 등에 P2P 업체 명의의 투자금 관리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회사자금과 구분 관리
  - 현행 방식은 P2P 업체 명의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예치되어 있어 업체의 도산·횡령 등의 문제에 대해 투자금 보호 미흡
- (규율방안)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P2P 업체의 자산과 고객자산을 명확히 분리·관리하는 장치 마련

- ①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 및 예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
- ② 은행, 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·신탁\*토록 하여, P2P 업체가 투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
- ③ P2P 업체가 파산 등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,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

## 3) 정보 공시

- (현행) P2P 업체별로, 업체의 영업실적에 대한 기준 및 투자자·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이 상이
  - P2P 업체, 투자위험, 차입자, 투자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경우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
- (규율방안) 투자·차입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, 제공 전 관련사항 확인의무를 P2P 업체에 부과
  - \* 한국P2P금융협회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표준안 마련 및 P2P 업체 정보(대출잔액, 연체율 등)를 비교 공시할 예정

- ① (투자자 제공 정보) 차입자 신용도, 자산·부채 현황, 소득·직장 정보, 연체기록,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제공
  - 특히,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\*,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(감정평가서·등기부등본 플랫폼 공시) 강화
  - \* 정보공시를 통해 P2P 업체 자율적으로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하여 담보물 회수에상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도록 유도
  - 아울러, P2P 업체의 누적 대출액, 대출잔액, 연체율 등을 플랫폼에 공시(매월)토록 하여 투자자의 업체선정에 도움
- ② (차입자 제공 정보) 차입자가 P2P 대출 이용시, 부담하여야 할 전체금액(대출이자·수수료 등)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
  - \*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금리 상한규제의 우회 방지 가능
  - 또한, 차입자에게 상환방식, 연체이자 및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

## 4) 기타 준수사항

- (영업행위 준수사항)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\* 또는 차입자\*\*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
  - \* P2P 업체의 역할은 대출정보의 중개(리스크 부담 없음)이나, 투자에 직접 참여하여 일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중개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
  - \*\* [사례]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
- (광고시 준수사항) 유사수신 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, '원금보호', '확정수익' 등 투자자 등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 금지

## 5) 타 법령과의 관계

- P2P 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률\*은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준수하며 영업해야 함
  - \* '개인정보보호법'(개인정보의 수집·처리 등), '대부업법'(계약서 교부 등), '전자상거래법'(거래기록의 보존 등), '신용정보법'(추심 등) 등

## 2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방안

### 1) 연계 금융회사를 금감원 검사·감독 대상에 포함

- P2P 업체(플랫폼)와 연계된 금융회사(대부업체, 은행·저축은행 등)가 자산관리자(대출실행, 원리금분배, 추심 등)의 입장에서 P2P 업체\*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

\* 대부분의 P2P업체(플랫폼)은 현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'통신판매업'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 → 금감원의 검사·감독 대상이 아님

- 연계 금융회사가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, P2P 업체는 연계 금융회사에게 정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토록 가이드라인에서 의무 부과
- 금감원은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·감독 등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

- 연계 금융회사가 소규모 대부업체\*(지자체 등록 대상)인 경우 현행 법령상 금융당국의 검사·감독 권한이 없으므로,

\* 자산 120억원 & 대출잔액 50억원 이상 등의 대부업체만 금융위 등록 대상

- ➔ '대부업법 시행령 개정'을 통해 P2P 업체(플랫폼)와 연계하는 대부업체를 '금융위 등록' 대상으로 규정(→금융당국의 감독 대상)

※ 연계 금융회사가 은행·저축은행인 경우 현재 금융당국의 검사·감독 가능

- 시행령 개정까지 지자체에 등록하는 연계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- 금감원간 협업(행정지도, 행자부 협의)을 통해 감독 강화

- 가이드라인 발표시,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을 전제로 금감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시행을 예고

\* P2P 협회를 활용(내부신고)하여 가이드라인 미준수 및 불법영업 감독

## 2)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관리 방안

### (1) 은행·저축은행 연계형 : 금융회사의 부수·부대업무 제한

- (은행) 은행은 P2P 업체(플랫폼)로부터 수탁받은 대출실행,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

- 부수업무 운영의 제한·시정(은행법 §27의2④) 또는 약관 심사(은행법 §52) 등을 통해 제한

- (저축은행) 플랫폼과 연계된 저축은행의 대출실행, 자금관리 업무는 금감원장 승인이 필요한 부대업무(저축은행법 §11①)

- P2P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, 저축은행의 대출실행 등은 승인받은 부대업무가 아니므로 저축은행에게 업무범위 위반으로 제재(저축은행법 §24①) 가능

### (2) 대부업체 연계형 : 시정명령 부과

- 대부업법상 금감원의 업무검사(§12⑦) 결과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 부과 가능

-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,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명령 가능(§13①)

\* 대부업체 연계형의 경우 거의 모든 대부업체가 P2P 업체의 자회사(100%)이며, P2P 업체와 사실상 같은 공간에서 구분없이 사업을 영위

- 아울러,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 규정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(시행령 개정 필요)

-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플랫폼과 연계한 대부업체에 한해서 총자산한도(자기자본 10배) 규제를 완화할 계획

## IV. 향후 계획

### 1. 가이드라인 시행(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)

-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가능한 조속히 시행하되, 기존 P2P 업체들에게는 사업정비\*를 위한 유예기간(3개월) 부여

\* 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마련, 전산시스템 수정 등 준비기간 필요

### 2. 지자체 협조 요청(가이드라인 시행 ~ 시행령 개정 前)

- 시행령 개정 전까지 연계 대부업체 중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지자체에 행정지도 요청(행자부·지자체 협업)
- 행자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

※ '16.3월 법정 최고금리 행정지도시 금감원에서 지자체에 인력지원 등 실시

### 3.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('16.12월 중 입법예고 목표)

- 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,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
- 시행령 개정을 가능한 조속히 완료하여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·감독 권한 근거 마련

### 4. P2P 업체 실태조사 실시('16.11월~12월말)

-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P2P 업체를 포함하여 P2P 대출시장 전반('16.9월 기준 약 80개 추정)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

\*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활발히 영업하고 있는 선도 업체들이 P2P 협회에 대부분 가입(29개)해 있어 시장파악을 위해 협회의 통계 및 자료를 활용